시 론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이렇게 하자

이 민 원
광주대학교 교수

지금 대한민국에 통합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다.

현 행정체계에서 각자도생하던 지역들이 주변 자치단체들과 연합하여 상호협력하는 지역발전 전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과 충청권(충남, 대전, 세종)의 메가시티 계획이 지역 정책에 충격을 주더니, 행정통합 논의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대구와 경북의 통합논의가 2020년 들어 본격화되었고, 광주와 전남에서도 2020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아직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행정통합이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대구·경북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고, 광주·전남은 아직 연구 중이다. 통합과 반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타당성을 자세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행정통합 주장의 이유는 ▲규모를 키워 효율화 ▲두 지역이 합쳐 기존과는 다른 새로움의 창조 ▲지역발전을 선도할 통합과제 추진 ▲지역갈등 해소로 지역발전 공동 대처 등을 들고 있다.

반면 행정통합 반대의 이유로 ▲두 지역은 경제활동 면에서 분리되어있지 않으므로 통합을 한다고 효율화가 나타나지 않음 ▲오히려 광역단체 하나가 소멸함으로 인해 국가지원이 감소하여 정부 과제의 축소가 예상됨 ▲광주 측에서 보면 광주의 재정이 전남으로 투입될 우려 ▲전남 측에서 보면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광주 인근으로 국책사업이나 산업이 집중될 가능성 등이다.

이 주장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양측 주장의 '타당성'과 그 주장의 '이유'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주장의 타당성 검증은 그 주장의 암묵적 가정이 성립하는지를 보면 된다.

행정통합을 하면 지역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갈등을 없애는 등의 효율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에는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가져온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있다.

따라서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 분리되어있는 행정이 얼마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통합을 하면 더 커진 행정단위가 어떤 면에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반면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주장은 행정통합을 해도 양 지역 간에 협조가 잘 안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있다.

동시에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통합된 행정구역 안에서도 협조가 불가능했던 실제 사례로 그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왜 지역발전 사업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설득력 있게 증명해내야 한다.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왜 하필 지역발전사업에서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수긍할 만한 답을 내놓기는 힘들다고 여겨진다.

양측 주장의 이유에 대한 검증은 어떤 주장이 상대편 주장의 이유를 충족시키는지로 판가름 난다. 어떤 주장이든 그 이유는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통합 주장의 이유를 요약해서 말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이고, 행정통합 반대의 이유는 행정통합으로 인한 재정축소나 지역간불균형 등의 손실 방지다. 이들은 우리 지역의 앞날에 매우 중요한 고려요인들이다.

따라서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행정통합을 하여도 양 지역 총량으로 본 중앙정부 지지원 예산을 오히려 늘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광주 지역과 전남 지역 간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의 낙후지역으로 광주의 예산이 이동하지 않고도 전남 낙후지역을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광주시민들은 안심할 것이다.

그리고 전남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려면 전남의 사업들이 광주 인근으로 집중되지 않을 방안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행정통합을 하지 않아도 양 지역을 묶어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화를 달성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엄연히 다른 행정구역끼리 두 지역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통합사업 선정에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양 지역의 첨예한 이익이 걸린 사업에서 서로 화합을 잘하면서 양 지역 전체이익을 증진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쯤에서 행정통합 주장과 반대에 대해 판단을 해보자. 먼저 양측 주장의 이유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행정통합 주장의 이유는 진취적이다. 화합과 새로움을 추구하고, 더 큰 세상으로 전진하자고 한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가치다.

반면 행정통합 반대 주장의 이유는 기존의 상태 유지, 손실 방지 등으로서 현실 안주의 퇴행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나름대로 보수적인 가치로서 존중받아야 하므로 행정통합은 이 가치를 존중하면서 더 나은 세계로 전진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행정통합 찬반 논의는 특별한 계산 없이 각자의 주장만 나열해왔다.

이제 행정통합과 비통합이 초래하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통합에 대한 낭비적인 공방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社 說

올해 쌀 과잉 생산분 빠르게 시장격리해야

올해 쌀 가격이 폭락할 조짐을 보인다. 주산지인 전남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보다 벼 재배면적이 늘어난데다 작황도 호전돼 수확기에 병해충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으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년대비 31만톤이나 증가한 382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소비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다. 2022년에는 354만톤에 불과해 과잉물량은 약 28만톤 규모로 점쳐진다.

여기에 정부가 모두 5차례에 걸쳐 관리양곡 31만톤을 공매한 결과,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은 지속적인 하방 압력까지 받고 있다. 줄잇는 물가인상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신곡 생산량 증대와 재고 누적, 신곡 수요량 등을 고려하면 쌀값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가 경영이 타격을 입을게 뻔하다. 농업인들은 심각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근본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가 건의한 2021년산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 특별대책은 일견 타당하다. 선제적인 시장격리가 그것으로 올해 과잉물량과 구곡에 대한 격리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초과 양곡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함께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주지하듯 쌀 농사는 농업·농촌 경제의 근간이다. 하지만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 쌀값은 한 번 낮게 형성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유통구조상의 특징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만큼 즉각적 조치가 시급하다. 정부와 관계당국이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특단책을 내야 할 것이다.

'풍년의 역설'이라고 해야 할 듯 싶다. 수확기를 맞은 농민들에게서 웃음을 찾기 힘들다. 깊어지는 시름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줘야 한다. 그렇다고 당장 국민들의 쌀 소비를 확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과잉물량에 대한 신속한 시장격리부터 실행해야 옳다. 전남도의 긴박한 성명을 숙고해서 주저함이 없이 결정해야 한다.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 조기에 본격화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이 최종 반영됐다. 전남지역은 해저터널과 함께 신안 추포-비금 등 10개 지구, 1조7천859억원 규모가 포함됐다. 이는 전국 대비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가 도로망 SOC 확충 추진 이래 유례없는 최대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영호남 화합 측면에서 가장 뜻깊다. 한려대교 건설계획 이후 20여 년의 성원 끝에 이뤄진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다. 해저터널 신설은 2002년부터 추진됐지만 지난 4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가 지난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또 이번에 국토부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해 서면과 여수 상암동을 잇는 총연장 7.3㎞(터널 5.93km, 접속도로 1.37km)로 6천824억원이 투입된다.

여수와 남해는 본래 지형상 좁은 바닷길이 사이에 있어 1시간20분 이상 우회하는 거리이나 터널이 개통되면 5분 내외의 직선 단거리로 연결돼 30분대 공동생활권이 가능해진다. 지난 2020년 개통한 여수-고흥 백리섬섬길과 연계해 부산-목포 해양관광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돼 지역균형개발 및 관광사업 활성화에 시너지 역할을 할 것이다. 연간 방문객 7천만명이 여수·순천과 남해·하동·사천을 넘나들 수 있게 되며 고성·통영·거제까지도 그 영향권이 확대될 수 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영호남 동반성장의 상징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국토부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확정돼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지역 출신 국회의원, 지방의회, 지자체, 주민의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됐다. 향후에도 국가균형발전과 주민 및 관광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른 시일 내 공사가 본격화할 수 있도록 주시해야 한다. 전남도는 오랜 숙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영순의 '문화터치'

동네 책방들의 소소한 반란

광주문화재단 문화융합본부장

요즘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문화관광부 독서인구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에 한 권 이상 읽는 사람이 52.1%라고 한다. 거꾸로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무려 절반에 이른다. 디지털 시대 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추세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이든 간에 종이책이 가진 매력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매력에 빠져드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거다. 그에 대한 항거로 독립운동하듯 나선 이들이 있다. 동네 책방들이다. 수입구조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책을 매개로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양서를 권하고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며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 밑작업을 꿋꿋이 해오고 있다.

오랫동안 서점은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사이트였다.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곳만이 아니었다. 시내에서의 약속 시간이 좀 남을라치면 서점을 찾곤 했다. 그곳에서 좋아하는 책을 찾아 내어 선채로 쪽 읽기를 했다. 다음 번에 가선 나머지를 읽었다. 그리고 약속장소도 서점 앞인 경우가 많았다. 70-80년대 충장로의 노른자 땅에 서점이 위치한 이유이다.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일일테지만 그 때는 그랬었다. 서점이 다른 곳 못지 않게 우리들에게 친숙한 공간이었다. 그만큼 책을 가까이 했었던 시절이었다.

이제 디지털 사회다. 페이퍼보다는 영상을 더 선호하는 시대다. 책도 종이가 아닌 전자책으로 읽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 큰 변화는 독서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거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인류가 역사적으로 혁명과 진보, 그리고 성공을 거뒀다면 그것은 기록과 그 기록을 통해 축적된 지식의 공유를 통해서였다. 디지털 사회에 우리는 그 짓(?)을 별 고민없이 양보해버렸다. 기록과 그 기록을 통해 축적된 지식의 공유를 가차없이 외면해버린 것은 인류 발전은 물론 어쩌면 삶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유지를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작은 동네책방들이 나섰다. 뭔가를 해보겠다고. 올해 첫 번째 행보로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릴레이 북토크를 펼쳤다. 의외의 호응을 얻었다. 꽤나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6월부터 4개 동네책방이 돌아가며 릴레이 북토크를 열었다. 6월 '러브앤프리'(대표 윤샛별), 7월 '동네책방숨'(대표 이진숙), 8월 '사이시옷'(대표 김지연), 9월 '책과생활'(대표 신헌창) 순으로 펼쳐졌다. 올해 마지막 행사로 9월29일 '책과생활'은 '모모는 철부지 : 전일방송 대학가요제의 기억'의 저자 장상은 작가를 초대해 1978년부터 3년간 짧고 강렬했던 '전일방송 대학가요제'에 대한 추억을 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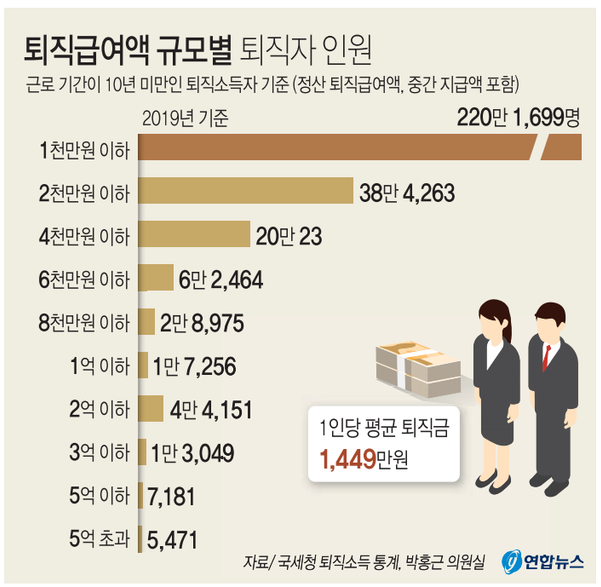
동네책방 파종모종의 대표 양지애가 총괄기획을 맡아 릴레이 북토크를 이끌며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었다. 예산도 넉넉지 않고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순전히 참여하는 동네책방 주인들의 열정과 의지 하나로 엮어낸 파일럿 프로젝트다. 시작하면서 이게 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모든 걸 딛고 작지만 튼실한 성과를 엮어냈다. 유튜브 비대면 중계로 이뤄진 북토크는 실시간으로는 꾸준히 40~50명, 그리고 이후 누적 조회수는 편당 1천명까지 올리는 개가를 올렸다. 여기엔 오랫동안 전라도닷컴을 운영하며 지역의 문화자산을 미래 동력 에너지로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아온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의 공로가 숨어있다. 이제 시작이다. 연대의 힘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에서 작지만 강한 움직임을 행해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낸다. 다시 말해, 동네책방이 소소한 반란을 일으켰다. 지역을 토대로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 로컬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동네책방이 거들고 나서겠다는 거다. 이 반란은 내년에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뉴스

회사 10년도 안 다니고 퇴직금 50억 이상은 5년간 단 3명

회사에 다닌 기간이 10년도 채 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50억원 넘게 받은 사람이 최근 5년간 단 3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퇴직소득자는 300만명에 육박했으나 이들 가운데 10명 중 7명은 퇴직금을 1천만원도 받지 못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퇴직금(정산 퇴직급여액, 중간 지급액 포함)을 50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이었다. 이들은 '평생 직장'이 아닌 일터에서 비교적 단기간 일을 하고 퇴직금을 최소 50억원씩 챙겼다. 다만 이들이 받은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는 개별 납세자 정보이므로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연도 전체 퇴직자는 전년(283만885명) 대비 13만3천647명(4.7%) 증가한 296만4천53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퇴직금 총액은 42조9천571억원, 1인당 퇴직금은 평균 1천449만원이었다. 구간별로 보면 퇴직금이 1천만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가 220만1천699명이었다. 퇴직금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천852명(2.4%)이었다. 최상위 구간인 5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5천471명(0.2%)으로, 평균 퇴직금은 1인당 8억3천584만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인기명소 올레·둘레길 탐방도 좋지만

최근 걷기 열풍과 더불어 올레길이 국내 도보여행의 대명사로 통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많은 행락객이 모여드는 전국 유명 여행지를 찾는다는 부담감과 메마른 사회생활에서 그것도 콘크리트 건물에서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가족과 또는 연인과 함께 호접한 흙길로 된 올레길을 걷고 싶을때가 있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 아닌나 자신의 안전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몇몇 올레길을 걸어본 경험에 의하면 전국의 수많은 올레길 대부분이 입지적 여건과 주변 풍광을 고려하여 조성되다보니 인적이 드문 산길이나 바닷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바다 또는 강 주변 올레길은 시야가 개방되어 있어 나은 실정이지만 일부 올레길은 주 탐방코스가 숲길을 경유하다 보니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외진 곳이다.

풍광이 아름다운 올레길을 선호하는 탐방객 입장에서는 올레길을 걷다가 자칫 길을 잃거나 신변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기도 마땅찮을 수밖에 없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유비무환이다. 나 자신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진 올레 둘레길 탐방에 혼자 걷는 것을 자제하고 주변 동반자와 함께 걷거나 사전에 충분한 코스 확인, 저녁시간대 방문자제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비책 마련은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학교폭력'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해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학교폭력의 매개체가 돼 중·고등학생들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세력을 규합해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카카오 개정 뺏는 등 그 유형도 다양하게 학교폭력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과 학교, 학부모가 합심해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여러 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과 등굣길 캠페인 등 다양한 선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대화를 해야 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 할 때는 즉시 학교나 117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신고해 적극적인 1대1 상담을 통해 크고 작은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에는 경찰과 학교 그리고 학부모가 삼위일체 돼 다각도로 대처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학교에 조금이라도 빨리 등교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학부모들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